

복지권리 보장! 지방자치 보장! 박근혜정부의 사회보장사업 후퇴시도 저지!

##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복지담당 기자  
제 목 「지역복지 · 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보도 요청 건 (6장)  
담 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010-6433-8427, [wooriwelfare@hanmail.net](mailto:wooriwelfare@hanmail.net) )  
제 공 일 2015년 12월 29일(화)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 및 기초단체장 / 대구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답변 결과」

단체장 전원(100%), 대구시의회 16명(53%), 기초의원 27명(23%) 답변. 154명 중 52명 답변(34%)

광역 및 8개 기초단체장, 서구의회 의원 전원 답변 vs 중구·남구·달성군 의회 전원 미답변 무관심 일관

○ 단체장 중 중구청장 만 ‘자치권 침해’와 ‘반대’ 입장 표명, 대구시장 ‘자치권 침해’지만 ‘찬성’

○ ‘자치권 침해다’ : 대구시의회 의원 5명(31%) vs 기초의원 25명(93%) 대조적

1. 지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수준을 일정부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서면 설문조사에 대해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지난 11월17일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명백히 지역복지 축소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시도임을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는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56개 사업(예산으로는 약 226억 원에 달함)에 대해 제도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3. 이에 대책위는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로 서면 질의서를 11월26일부터 공문으로 발송하여 12월22일까지 수합하였다.
4. 그 결과,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은 전부 답변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은 30명 중 16명이 익명으로 답변(53%)했고, 기초의원은 116명 중 27명(23%)이 응답했다. 질의를 한 154명 중 52명이 답변해 응답율은 34%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 서구의회 의원은 전원 답변한 반면, 중구의회·남구의회·달성군의회는 답변한 의원이 전혀 없어 대조적이었다. 지역민의 대표기관이라 자임한 기초의회에서 한명도 관심을 갖는 의원이 없었던 이들 3개 기초의회는 무관심과 몰이해로 일관했다.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리할 책임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에 있다. 단체장들의 입장은 다양했다.
    - 단체장의 경우, 유일하게 중구청장만 정부의 정비지침에 의해 정비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치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구시장, 남구청장, 북구청장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자치권 침해’라 보면서도 ‘찬성’해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동구청장은 정부 논리대로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서구청장·달서구청장·수성구청장·달성군수는 ‘자치권 침해’ 여부와 ‘정비지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변을 회피했다.
  - 대구시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답변은 대조적이다.
    - 대구시의회 의원은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가 16명 중 6명(38%)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27명 중 25명(93%)이 ‘침해다’라고 답변했다.
    - 정부의 정비지침에 대해 반대한 대구시의회 의원은 6명(38%)에 불과했지만, 기초의원 은 18명(67%)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 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비교를 한 결과
    - 대구시장은 ‘일부 침해한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중 ‘침해다’고 답변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다른 질문에서도 대구시의회 의원은 ‘모르겠다’는 입장이 가장 많이 나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상당히 미약함을 드러냈다.
    - 전원이 답변한 서구의회 의원은 이번 정부지침은 ‘자치권 침해’라고 100% 같은 의견을 표명했고, 2명을 제외한 10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 6명이 답변한 동구의회는 4명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해 동구청장과 입장이 달랐고, 5명이 답변한 수성구의회 의원도 전원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했다.
    - 기타 다른 기초단체는 기초의원들의 응답률이 낮아 상호 비교하기 힘들었다.
6.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복지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면질의 답변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16명이 답변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익명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다. 3개 기초의원들은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기초의원이 가장 많은 달서구는 1명만 답변했다.

▣ 첨부자료.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서면조사 회신 분석 결과 끝.

##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행동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점상연합회대구지부,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평화캠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의사회대경지부 (총 30개 단체)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서면조사 결과

대상 : 대구시장 및 8개 구·군 기초단체장 / 대구광역시의회 및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 공개질의 방법 : 공문 발송 및 전화 등 확인(11.26~12.22)

○ 질의내용

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택1)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질의 2)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역복지와 지방자치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택1)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질의 3)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택1)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모르겠다
질의 4) 기타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관련한 입장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자유서술)

### 1.                    및 8개 구·군 기초단체장 답변 결과

- 해당 지자체 장 9명 모두 질의에 답변

	질의 1	질의 2	질의 3	질의 4
대구시장	1	4 (일부 침해한다고 본다)	1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목록으로 선정한 사업은 전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님 - 정비의 개념은 폐지 뿐만 아니라 사업변경, 사업통합 등을 모두 포함 ○ 지자체에서 자체검토를 거쳐 정부사업과 지원내용(대상자, 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는 정부사업과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사업명 변경(통합 포함), 지원근거 마련(조례 재.개정 등) 등을 통하여 가급적 현행 유지 ○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부의 추가지침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군의 의견, 시민단체 등과 협의 후 정비해 나갈 계획임
중구청장	2	1	2	-
동구청장	1	2	1	○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는 중앙업무(국토부, 한국장학재단 시행업무)와 유사 중복성이 있으며, 우리 구 시행사업보다 용자조건 등이 유리하며 실질적인 이용자가 수년 동안 전무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단계적 폐지가 요구됨
서구청장	1	-	-	○ 질의 2, 질의 3의 경우 선택지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가 필요하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우리 구의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사업유지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장	1	1	1	-
북구청장	1	1	1	-
달서구청장	1	-	-	○ 우리 구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유지 및 정비에 관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임. 현재까지는 특별히 정비한 사업은 없으며 검토 중에 있음.
수성구청장	2	-	-	○ 수성구는 2개 사업인데 현재까지 정비할 계획이 없음.
달성군수	1	-	-	○ 질의2)와 3), 4)와 관련하여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으나 대상자 및 지원방법 등 중복되는 분야의 사업은 필요하다면 정비하여 절감재원으로 신규사업 발굴, 사업변경 등 우리 군의 연간 복지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있음
--	--	--	--	----

2. 의원 답변 결과 : 16명 익명으로 답변

- 의원 30명 중 16명 익명으로 답변 회신(회신율 53.3%)

구분	질의 1	질의 2	질의 3	질의 4
시의원 1	3	1	2	-
시의원 2	1	1	2	-
시의원 3	1	2	3	
시의원 4	1	2	2	○ 중앙정부가 정비지침을 내리는 것은 상하조직체계상 그럴수도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지정해서 지방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의원 5	3	1	2	-
시의원 6	1	2	1	-
시의원 7	1	2	1	
시의원 8	3	3	3	
시의원 9	3	1	2	
시의원 10	3	3	3	
시의원 11	3	1	2	
시의원 12	3	3	3	
시의원 13	1	2	1	
시의원 14	1	2	1	
시의원 15	3	3	3	
시의원 16	3	3	3	

3. 8개 구·군 기초의원 의원 답변

- 대구 전체 구의원 116명 중 27명 답변, 응답율이 23%에 불과했다.

- 특히 중구, 남구, 달성군 의원은 전원 응답하지 않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에서는 1명만 응답했다. 반면, 서구는 12명 전원이 응답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구분	질의 1	질의 2	질의 3	질의 4	비고	
중구	-	-	-	-	7명 모두 미답변	
동구	서정해	1	1	2	-	16명 중 6명 답변
	이재숙	3	2	2	-	
	김원재	1	1	1	-	
	박종희	1	2	1	○ 중복사업 정비는 필요하고 일부 복지정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복지대상자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	
	노남옥	3	1	3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권오수	1	1	1		
서구	김준범	2	1	2		12명 전원 답변
	김경호	2	1	2		
	안영철	2	1	2		
	김종록	2	1	2		
	김진출	3	1	2	○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오세광	2	1	2		
	임태상	1	1	1		
	홍병헌	1	1	1		
장태수	2	1	2	○ 정비계획 수립은 집행부 소관이나 의원으로		

					반대 ○ 지역복지 주권자인 주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장 내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까지 간섭하려는 행위로서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을 방해하여 결국 지역복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반대	
	손복자	2	1	2		
	정영수	2	1	2		
	조영순	2	1	2		
남구		-	-	-	-	9명 전원 미답변
북구	유병철	2	1	2		20명 중 3명 답변
	이동욱	1	1	1		
	이영재	2	1	2	○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비지침이다. 철회되어야 한다	
달서구	이유경	1	1	2	-	24명 중 1명 답변
수성구	김진환	2	1	2		20명 중 5명 답변
	김삼조	1	1	2		
	김성년	2	1	2		
	서상국	1	1	1	○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영선	2	1	1	○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달성군		-	-	-		8명 전원 미답변

#### 4. 내용 분석

답변 : 질의를 한 154명 중 52명이 답변해 응답율은 34%였다. 대구시장과 8개 기초단체장은 전부 답변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은 30명 중 16명이 답변해 53%, 기초의원들은 116명 중 27명만 답변해 23%로 가장 저조했다. 답변한 시의원 16명은 익명이었으며, 중구의회, 남구의회, 달성군의회는 답변한 의원이 한명도 없었다.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의한 정비 계획(질의 1) :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있다’가 24명으로 46%였으며, ‘정비계획이 없다’가 16명으로 31%, ‘모르겠다’가 12명으로 23%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단체장 중 중구청장과 수성구청장만 ‘정비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대구시장 등 6개 기초단체장은 ‘정비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 대구시의원은 ‘모르겠다’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계획이 있다’가 7명. 반면 ‘정비계획이 없다’고 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 반면, 구의원은 ‘정비계획이 없다’가 과반이 넘는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있다’ 10명, ‘모르겠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자치권 침해 여부(질의 2) : ‘자치권 침해’가 34명(6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치권 침해가 아니다’가 9명(17%), ‘모르겠다’가 5명(10%), 무응

4명(8%)이었다.

- 대구시장은 ‘일부 침해한다’, 중·남·북구청장은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반면 동구청장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구, 달서구, 수성구청장, 달성군수는 답변하지 않아 무응답으로 표시했다.
  - 대구시의회는 ‘자치단체 권한 침해 아니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침해한다’와 ‘모르겠다’가 각각 5명으로 조사되었다.
  - 기초의회는 27명 중 25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답했으며 2명만 ‘침해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한 개인의 입장(질의 3) : ‘반대한다’가 25명(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찬성한다’ 16명(31%), ‘모르겠다’ 7명(13%), 무응답 4명(8%) 순이었다.
- 중구청장만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시장과 동구, 남구, 북구청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장, 달서구청장, 수성구청장과 달성군수는 답변하지 않았다.
  - 대구시의원은 ‘반대’ 6명과 ‘모르겠다’ 6명. ‘찬성’은 4명으로 가장 적었다.
  - 기초의원은 ‘반대’ 1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 8명, ‘모르겠다’ 1명
- 질의 4)에 대해
- 대구시장은 ‘대구시 자체사업 내용이 상이할 경우 사업명 변경과 조례 재·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정부사업과 구별하고, 정부의 추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군의 의견과 시민단체 등과 협의 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5. 의회 간 상호비교 결과

대구시장은 ‘일부 침해한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중 ‘침해다’고 답변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다른 질문에서도 대구시의회 의원은 ‘모르겠다’는 입장이 가장 많이 나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상당히 미약함을 드러냈다.

- 전원이 답변한 서구의회의 의원은 이번 정부지침은 ‘자치권 침해’라고 100% 같은 의견을 표명했고, 2명을 제외한 10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 6명이 답변한 동구의회의는 4명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해 동구청장과 입장이 달랐고, 5명이 답변한 수성구의회의 의원도 전원이 ‘자치권 침해’라고 답했다.
- 기타 다른 기초단체는 기초의원들의 응답률이 낮아 상호 비교하기 힘들었다.

끝.

